



# 원자력 정보 공개의 정책 과제

함 철 훈

한국원자력연구소 기술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원** 반적으로 과학 기술의 연구·개발은 주로 인간의 지적 호기심 내지 학문적 열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고도화된 기술은 일상 생활에 응용되어 인류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지만, 기술의 응용 범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그 이면에는 새로운 위험원을 동시에 창출한다.

이와 같은 위험원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일단 기술이 보편화되면 관련 기술을 폐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피해를 사후에 구제하는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인류 사회에 각광을 받으며 등장하였던 첨단 과학 기술이 현실적 적용 과정에서 이목을 집중시키는 대형 사고를 유발하게 될 경우, 일반인들의 반응은 대체로 이성적이지 아니라, 예를 들어 님비(NIMBY) 현상과 같은 감정적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 서론

원자력은 경제적으로 저렴하고 풍부한 에너지원일 뿐만 아니라, 환자의 진단과 질병 치료, 식품 보존, 비파괴 검사 등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는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는 이제 우리의 일상 생활에 필수 불가결한 존재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원자력은 핵무기로서 인류에게 너무나 선명히 각인된 데다가 설상가상으로 미국의 TMI 원전 사고 및 옛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는 사회 일반인들의 원자력에 대한 위험 인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우 신규 원전 부지 및 방사성 폐기물 처분 부지의 선정에 사회적 저항을 겪고 있다.

에너지 자원이 풍부한 미국이나 일부 유럽 국가들은 지역 주민이나 또는 환경 단체들의 반원자력(anti-

nuclear) 주장을 수용하더라도 에너지 공급에 별 문제가 없겠지만, 전력 수요의 약 40%를 원전에 의존하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 주민 및 환경단체들의 반원자력 운동은 국가의 에너지 수급 정책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 나라와 같이 대체 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들은 원자력 이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적어도 새로운 에너지원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원자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날 원자력이 안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문제이다.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 문제는 비단 우리나라에만 한정된 것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원전 보유 국가에서 경험하고 있는 사회 문제라 할 수 있다.

특히 우리 나라는 원자력 발전의 증가와 함께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방

사성 폐기물의 누적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처분 부지를 아직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새로운 원전 부지 및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부지의 선정을 둘러싼 실패 사례를 보면, 원자력의 공학적·기술적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더라도 원자력 시설 주변 주민의 원자력에 대한 불안을 제거하고 그들의 동의를 얻지 못한 원자력 사업의 확대 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경험적으로 판명되고 있다.

현재 국내 원자력 사업의 추진에 결정적 장애 요소인 원자력에 대한 일반인들의 그릇된 위험 인식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으나 원자력 정보 공개의 사회적 기능 및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고 본다.

즉 일반인의 원자력 시설에 대한 위험 인식은 감성적·주관적임에도 불구하고, 공개 대상인 원자력 정보는 논리적·객관적이기 때문에 양자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자력 정보의 논리성·객관성을 어떻게 얼마나 감성화·주관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원자력 정보 공개의 정책적 과제라고 판단된다.

**원자력 위험(risk)에 대한 사회적 인식**

**1. 문제의 본질**

역사적으로 인류에게 공포감을

주는 위험원(risk)은 주로 태풍·홍수·지진·화산 폭발 등과 같은 자연 재해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러한 자연적 위험원은 인간의 의지로 통제될 수 없는 천재(天災)로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수용이 가능하였으나, 원자력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위험은 대부분 인재(人災)로 간주된다.

공학적·기술적 안전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자동차의 경우와 같이 자동차의 이용에 따른 잠재적 위험 수준 및 사고 발생 빈도를 경험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주관적으로 수용할 수 있을 때 일반인들은 위험을 감수한다.

그러나 원자력은 사고 발생 빈도는 지극히 낮을지라도 일단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의 광역성 및 심각성으로 인하여 일반인들은 원자력을 실제보다 더욱 위험하다고 생각하며 그 결과 원자력에 대한 수용을 주저한다. 특히 한국인은 생소하고 통제 가능성이 낮으며 복잡한 위험일수록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며, 위험의 발생 빈도보다는 위험의 심각성 정도가 위험인지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김영평, 한국인의 위험 인지에 관한 연구, 1994).

**2. 원자력에 관한 위험 인식**

'위험'의 개념에 대하여는 다양한 정의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사건이나 상태를 일으킬 잠재성 또는 발생 가능성'으로 정의한다.

그런데 원자력과 같은 기술적 위험에 있어서는 위험에 대한 인식 태도가 일반인의 원자력 정책의 수용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므로 원자력에 대한 위험 인식을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으로 구분하기로 한다.

'객관적 위험'이라 함은 위험에 대한 가능성 또는 확률을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객관화시킨 것을 말한다. 즉 특정 위험에 대한 확률을 원자력 전문가들이 통계적 기법을 사용하여 평가하는 위험을 말한다.

말하자면, 원자력 시설 등에 대한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 결과 또는 장기적 결합 분석 계산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평가된 '계산된 위험'을 말한다.

'주관적 위험'이라 함은 개인의 성격, 정신 상태, 감정, 신앙 등을 기초로 측정되는 심리 상태를 말하며 체감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주관적 위험은 객관적 위험 평가와는 관계없이 개인의 경험, 상상력, 추리력, 지식, 믿음 등에 의하여 수용되는 위험을 말한다.

따라서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일정한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위험한 사건의 발생 빈도에 관하여 완전하고도 정확한 정보의 부족과 통계적 증거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개인의 능력 부족에 기인한다.

둘째, 양자 사이에 발생하는 차이는 정보 또는 데이터의 해석에 차이

(표 1) 위험 인식에 대한 4가지 유형

구 분		객 관 적 위 험	
		높다	낮다
주 관 적 위 험	높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핵전쟁</li> <li>• 핵무기 제조 공장 폭발</li> <li>• 간암·폐암(남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한국)</li> <li>• 인도의 LPG 터미널 폭발</li> <li>• 유방암(여자)</li> </ul>
	낮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동차 사고</li> <li>• 흡연(담배)</li> <li>• DNA 조작 실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프랑스)</li> <li>• 자연 방사선</li> <li>• 감전, 익사, 스키장 사고 등</li> </ul>

\*자료 : 이상팔, 지역 주민의 위험 정책 수용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95, 13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를 가져오는 사회적 배경에 기인한다는 점이다.

셋째, 위험원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사건에 기인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일반 대중들은 히로시마 및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를 계기로 원자력을 평화적 측면보다는 엄청난 살상력을 지닌 무기로 인식해버렸다는 점이다.

### 3. 원자력 위험의 사회적 수용성에 대한 지역적 편차

이제까지 원자력과 관련한 위험이 현실화된 경우, 원자력 전문가 집단은 이를 공학적·기술적 측면에서 해결을 시도하려는 경향이 농후했으나 이에 대하여 사회 일반인들은 매우 냉담하게 반응하여 왔다.

과거에는 원자력에 대한 기술적 평가 그 자체만으로도 일반 주민들이 정부의 원자력 정책을 수용하였으나, 이제는 더 이상 기술적 평가를 신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사실은 원자력 전문가들이 원자력의 공학적·기술적 안전성을 아무리 자세히 설명하더라도, 일반

주민들의 원자력에 대한 주관적 판단은 이와는 전혀 무관하게 형성된다는 점이다.

그런데 원자력 위험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은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각국의 사회적·역사적 배경 및 보편적 가치관의 차이와 일반 대중의 원자력 위험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원자력 정보 공개 제도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원자력발전소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프랑스 국민은 미국 시민에 비하여 위험을 덜 느낀다는 사실이다.

## 각국의 원자력 정보 공개

### 1. 프랑스

가. 개요

90년대에 들어 미국 및 사회주의 노선을 표방하는 정당들이 집권한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원전 계획을 축소 내지 취소하는 움직임이 현저히 나타났으나, 프랑스는 원자력 발전을

주요 전원으로 개발하여 96년에는 총 전력량의 약 75%를 원자력 발전으로 충당하였다.

다른 유럽 제국과는 달리 프랑스가 원전에 대하여 일반 공중의 높은 지지를 얻고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원자력을 추진하는 측에서 원자력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정보 공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자력 정보 공개 체제를 일찍부터 정비하였음에 기인한다고 본다.

#### 나. 정보 공개 관련 행정 조직

##### ① DSIN

DSIN은 73년에 설립된 기관으로서 원자력 안전 규제 업무를 주로 담당하지만, 그 설립 정령(政令 : Decree)에서 '일반 공중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가 안전 규제 기관의 역할을 명문화하고 있다.

##### ② CSSIN

73년에 설립된 CSSIN은 원자력 시설의 안전 문제를 담당하는 산업·우정·통신 장관의 자문 기관으로서 국민에게 원자력에 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공개하는 것이 주임무이다. 그러나 CSSIN의 역할은 비상 사태 발생시 이를 지휘하는 기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정보 전달 조직의 정비·개선에 관한 권고를 행하는 자문 기관에 불과하다.

#### 다. 일상의 정보 공개

프랑스에서 일상의 원자력 정보는 미니텔을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제공 프로그램은 MAGNUC

(DISN 제공), TERLERAY(OPRI 제공), ANDRA, EDF, COGEMA 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MAGNUC은 DSIN이 87년 CSSIN의 권고를 수용하여 운용을 개시한 세계 최초의 원자력 정보 제공 네트워크로서 안전에 관한 정보(제공 : DSIN), 건강에 관한 정보(제공 : OPRI), 환경중 방사능 측정 결과(제공 : 원자력 사업자 및 IPSN)를 제공한다.

한편 원자력 시설 부지 지역에는 각각 시설의 감시 및 정보 공개를 위하여 지역정보제공위원회(CLI)가 설치되어 있다. CLI는 81년 11월 15일 수상의 권고에 의하여 대형 발전 시설을 대상으로 지방 의회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CLI의 설치 목적은 대형 발전 시설(대부분은 원전)의 영향에 관한 조사 및 그 결과를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일반 공중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CLI는 지방 의원(일반적으로 구성원의 약 1/3), 환경 단체 대표자, 노조 대표, 각종 직능 대표 및 행정 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라. 원자력 사고시 정보 공개

TMI 원전 사고,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계기로 원자력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정보 제공 문제가 프랑스에서도 일반 주민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다.

이에 따라 프랑스는 지진·강풍·눈사태 등의 자연 현상에 대하여 이

전부터 도입하여 왔던 방식을 87년 이후 원자력 시설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trouble을 1(이례적 운전 사고) 내지 6(대형 사고)으로 분류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한편 IAEA는 91년 프랑스의 이러한 제도를 참고하여 국제 원자력 사고 척도(INES)를 도입하였고, 프랑스는 93년 INES를 채택한 후 94년 4월부터 INES에 의한 사고 분류를 행하였다. 그리고 level 1 이상의 모든 사태는 자동적으로 MAGNUC에 게재되며, level 2 이상의 위기 상황에서는 담당 정보 센터가 모든 전달 매체를 통하여 일반 공중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마. 언론에 대한 이해 촉진 활동

프랑스에서는 공개된 정보를 해석하여 일반 주민이 알기 쉽도록 사용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대응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 주민에 대하여 원자력 안전 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은 여론의 가교 역할을 하는 언론과의 관계를 전제하고 있다.

이외에도 원자력 사업자는 별도의 정보 공개 활동을 수행한다.

2. 일본

가. 개요

원자력에 대한 반대 분위기가 비교적 강한 일본은 원자력에 대한 연구·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반 국

민의 원자력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전부터 정보 공개를 추진하여 왔으나, 특히 동력로·핵연료사업단(현재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로 개칭되었다. 이하 「핵주기기구」라 한다)의 몬주 사고 이후 정보 공개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 3월 발생한 핵주기기구의 동해사업소 체처리 시설 아스팔트 교차 처리 시설의 화재 폭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핵주기기구측의 사고 발생 보고 지연 및 허위 보고 사실이 알려져 원자력에 대한 사회의 불신이 고조됨으로써, 원자력에 대한 정보 공개를 사회적·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핵주기기구는 정보 공개 지침을 대폭 수정하였다.

나. 정보 공개 지침의 기본 방향

핵주기기구의 정보 공개 지침은 일본 정부가 추진한 정보공개법의 제정에 앞서 원자력 분야의 특수 법인으로서 최초로 제정한 것이다. 이 지침의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핵비확산, 핵물질 방호 등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② 노하우(know-how)와 관련된 비공개 정보는 작성일로부터 일정 기간 경과 후에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③ 공개 청구를 받아 공개하는 수동적 정보 공개뿐만 아니라 자주적 내지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능동적 정보 공개를 목표로 한다.

④ 기술 성과 보고서 목록을 작성·공표하고 일반인의 이용 편의를 도모한다.

#### 다. 정보 공개 지침의 주요 내용

이 지침에서는 우선 공개 대상인 '정보' 및 '공개'에 대한 정의의 규정을 두고 있다. 공개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공개 청구에 관련된 핵주기기구 자료에 별표에서 정한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는 자료를 공개한다.

② 공개 청구에 관련된 핵주기기구 자료의 일부에 별표에 정한 비공개 정보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부분과 이를 제외한 부분과를 용이하게 구분할 수 있을 때에는 당해 부분을 제외한 부분마다 공개한다.

③ <표 2>중 노후우 정보에 정한 비공개 정보를 포함한 핵주기기구 자료는 당해 자료 작성 후 일정 기간을 경과한 후에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한편 공익상 이유에 의한 공개가 제한되는 자료일지라도 당해 핵주기기구 자료를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이익에 우월한 공익상의 이유가 있다고 특히 이사장이 인정할 때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개 청구에 관련된 핵주기기구 자료를 공개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개 청구자에 대하여 이유를 부기하여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한다.

### 3. 우리 나라

우리 나라는 80년대 후반부터 원

자력은 위험하다는 일부 환경 단체의 주장과 언론의 보도로 인하여 원자력에 대한 실상을 일반 국민에게 정확히 알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한국원자력연구소 및 한국전력공사 등 원자력 관계 기관들은 원자력의 중요성과 진상을 알리려는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은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원자력에 대한 신뢰를 획득하기 위하여 원자력에 대한 정보 공개가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89년 이후 원전과 관련한 정보 공개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96년 12월 31일 법률 제 5242호로 제정되어 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으로써 원자력 정보 공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현재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보 공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자력 공개 지침의 제정, 언론, 공개지, 전화, 컴퓨터 통신, 시설 공개 등으로 확대하여 온 원자력 공개는 국민들이 보다 손쉽게 편리하게 원전에 대한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개 범위도 법적으로 위배되거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산업 비밀에 속하는 사항 이외에는 모두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원전의 고장·사고에 대하여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규정한 「원전 사고·고장 등급 분류 기

준」에 따라 이를 즉시 발표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97년에는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공개 제도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특히 주민들이 실감할 수 있는 공개 제도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예를 들면, 원전 운영 관련 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하여 영광 원전에서 96년 12월부터 시행하여 온 원전 운영 정보 시스템을 97년에는 울진 원전 지역에, 12월에는 월성 원전 지역에도 설치하여 개통하였다.

이 운영 정보 시스템은 인터넷과 원전 주컴퓨터를 온라인화하고 원전 운전 현황, 방사선 관리, 언론 보도 자료 등을 실시간대에 제공하여 원전 운영 정보의 공유화를 도모하고 있다.

셋째, 원전 주변 기형 가축의 원인 규명을 위한 역학적 데이터 베이스의 구축이다.

그동안 원전 주변에서 기형 가축이 발생하면 원전의 방사선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과 민원이 제기되어 온 것을 감안하여, 이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하여 원전 지역과 대조 지역의 가축에 대한 각종 정보를 데이터 베이스화 하는 데 착수하였다.

이 사업은 4개 원전 지역과 충남 서천 지역을 대상으로 가축에 대한 가축 사육두 수, 가구 수, 기형 발생률, 사육 환경 등을 지속적으로 추적·관리함으로써 기형 가축의 발생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하여 주민들의

(표 2) 일본 핵연료사이클개발기구의 비공개 원자력 정보

구분	비공개정보
개인 정보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이 식별되거나 또는 다른 정보와의 조합함으로써 식별될 수 있는 것. 다만 다음과 같은 정보는 제외한다. ① 관행상 알려져 있는 정보 또는 공개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보 ② 성명 및 기타 특정 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정보의 부분을 제외함으로써 공개하더라도 본호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이익이 침해될 위험이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③ 핵주기기구의 직무 정보에 포함되는 결재권을 가진 관리직의 직위 및 기타 지위에 관한 정보 ④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보다 필요하다고 인정된 정보
노하우 정보	핵주기기구의 연구 개발 성과 등에 관한 정보 또는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 개인의 당해 사업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과 같은 것. 다만 핵주기기구 또는 당해 법인, 개인의 사업 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생명·신체, 또는 건강상에 대한 위해, 또는 재산, 및 생활의 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하는 것이 보다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제외한다. ① 공개함으로써 핵주기기구 또는 당해 법인, 개인의 경쟁상의 지위, 재산권 및 기타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것. ② 핵주기기구로부터의 요청을 받아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약속에 따라 임의로 제외된 것으로서 법인, 개인에 있어서 통상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되어 있는 것 및 기타 당해 약속의 체결이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것
핵비확산 정보	① 농축 시설, 재처리 시설 또는 플루토늄 연료 시설 등의 설계·건설·운전 또는 보수에 관련된 정보로서 다음과 같은 것 ② 공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함에 족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③ 핵주기기구와 외국 또는 국제 기관과의 신뢰 관계가 손상될 위험이 있다고 인정함에 족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④ 외국 또는 국제 기관과의 교섭상 핵주기기구가 불이익을 입을 위험이 있다고 인정함에 족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핵물질 방호 정보	공개함으로써 범죄 예방, 공공의 안전 및 질서 유지에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핵물질 방호, 방해 파괴 활동 방지에 관한 정보
의사 결정 절차 정보	핵주기기구 내부 또는 관계 기관과의 검토 또는 협의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에 의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우려가 있는 것. ① 솔직한 의견 교환이 손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 ② 핵주기기구 업무 수행에 오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 ③ 특정인에게 이익을 부여하거나 또는 불이익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 다만 중간 보고로서 공개한 것은 제외한다.
업무 운영 관련 정보	감사, 정송, 교섭, 계약, 조사, 인사 관리, 사업 경영 및 기타 핵주기기구의 업무 또는 사업에 관한 정보에 있어서 오로지 핵주기기구 내부의 일상적 관리 운영을 위한 것 또는 공개함으로써 당해 업무 또는 사업의 성질상 당해 업무 또는 사업의 적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것.

원자력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해소시키려는 사업으로서, 97년 7월에 착수되어 99년 12월에 완료될 예정이다.

넷째, 정보 공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 매체를 통한 공개이기 때문에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한국전력공사는 고장 정지는 물론 사소한 사건도 즉시 언론에 통보하고, 산업자원부 및 과학기술부 출입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요 현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였다.

**결론 및 정책 과제**

원자력 정보 공개의 궁극적 목표는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의 신뢰형성에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는 나라마다 상이한 역사적 배경과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고려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무엇보다 정보 공개의 전략적 측면에 대한 깊은 이해가 전제되어야 한다.

즉 객관적인 원자력 정보가 지역 주민의 주관과 감성에 반응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첫째, 정보의 내용은 진실한 것이어야 하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도록

정보의 내용이 단순 명료화해야 한다.

둘째, 정보의 효과적 공개는 원자력 시설의 견학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안전성을 직접 확인할 때 가장 설득력이 있다.

영국의 Sheffield 재처리 공장이 기피의 대상이 아닌 관광 코스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셋째, 프랑스가 미니텔을 이용하여 정보 공개를 추진하는 바와 같이, 원자력 정보 공개와 관련한 정보 매체로서는 지역 민방 및 케이블 TV 및 지역의 과학관 등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원자력 행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물론 이와 같은 작업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원자력 전문가들이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전달하려는 경우, 일반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주관적 이해 관계라든가 또는 정리되지 아니한 선입견에 의하여 가끔 역효과(불신 관계)가 발생되기도 한다.

이러한 불신 관계의 해소를 위하여 사실을 있는 그대로 주민에게 정확히 공개되고 주민의 예상과 현실적 결과를 비교하여 시행 착오를 수정하는 자세를 가짐과 동시에 원자력 관련 리스크를 수용하는 주변 주민과 적극적으로 대화하는 자세가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주민이 단순한 행정권 행사의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행정 질



원자력 정보 공개의 궁극적 목표는 원자력의 안전성에 대한 주민의 신뢰 형성에 있다.

차 가운데 공동의 규제자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한편 정보 공개의 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과제로서 주민 참여 제도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주민 참여 제도는 행정청의 의사 결정 과정에 일반 주민의 공적 참여를 허용하는 제도로서, 다수의 이해관계자(개인 또는 사회 단체)에게 행정청의 의사 결정 과정에 있어서 공적 영향력의 행사를 승인하는 민주적 제도이다.

행정 절차에 주민을 참여시키는 목적은, 행정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행정권의 위법·부당한 행사를 방지하고, 행정의 민주적 통제를 기함으로써 행정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도 합리적 판단에 의하여 공정한 행정 결정을 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민 참여는 전문적·기술적 또는 정책적 정보가 이해관계자의 참여로 제공되는 정보 수집의 장으로서의 기

능도 수행한다.

오늘날 원자력 행정에 있어서 주민의 이해와 참여는 원자력 시설의 부지 확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지역 주민이 극렬한 반발 또는 저항을 계속하거나, 시설의 안전성 등을 문제삼아 행정 소송 등의 제기, 지방 자치 단체장의 각종 인·허가권의 취소와 같은 사태 등은 원자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결정적 장애 요소이므로 원자력 행정에 있어서 주민의 이해와 협력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과거의 행정은 법적 근거만 있으면 된다는 법치 행정의 원리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현대 행정의 특징은 법적 근거가 있더라도 그 권한은 일반적으로 행사될 수 없다는 사실이 폭넓게 입증되고 있다. 따라서 원자력 정보 공개의 일환으로서 주민 참여가 필요한 것도 이러한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